Global Market Report 20-014

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
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

kotra

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 방향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

CONTENTS

목 차

요 약 /1/

Ⅰ. 브렉시트 경과 및 주요 의제 /3/

1. 브렉시트 경과 및 전망
2. 미래관계 협상 주요 의제

Ⅱ.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치·경제적 변화 /5/

1.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 위상 변화
2. EU 新집행위 구성 및 정책방향
3. EU의 주요 경제·산업 정책
4. EU의 주요 통상정책

Ⅲ. 브렉시트 이후 EU 예산 변화 및 영향 /16/

1. EU 예산 구조 및 회원국 별 기여도
2. 영국 기여도 및 브렉시트 이후 예산 분담
3. EU 예산 계획에 따른 영향 및 기회

Ⅳ. 시사점 및 대응방향 /22/

요 약

□ **(브렉시트 경과) 영국은 '20.1.31일자로 EU를 탈퇴, 전환기간(~'20.12.31일) 동안 EU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** 완료 예정

【브렉시트 주요 일지】

○ '16.6월	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
○ '17.3월	영국, EU에 탈퇴의향서 제출
○ '18.11월	영-EU 간 탈퇴협정 합의
○ '19.1월～'20.1월	영국 및 EU 의회의 합의안 비준 ('19.10월 새 합의안 타결) (영 의회의 4차례 합의안 비준 거부 및 영국 조기총선 실시)
○ '20.1.31일	영국의 EU 탈퇴 (브렉시트)
○ '20.12.31일까지	전환기간 (영-EU 간 미래관계 협상 4차례 진행, '20.6월기준)

○ 양 측 입장 차 및 코로나19 등으로 **영-EU 간 미래관계 협상 난항**

- 전환기간 중 양 측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전환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, **노딜 브렉시트 가능성**

□ **(위상변화)** 브렉시트 이후 EU의 **경제적 위상 약화는 불가피하나 외교, 안보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**

○ **세계 GDP(PPP) 비중 및 순위 하락 : 2위**(15.79%, '19년기준) → **3위**(13.62%)

* 세계 GDP(PPP) 비중(%, '19년, IMF) : 중국(19.71), EU(15.79), 미국(14.90), 인도(8.27), 일본(3.94)

○ **대서양 관계**(미국-유럽)**는 큰 변동 없을 전망**

- 냉전 이전 영국은 대서양 관계의 중재자 역할 자처했으나, 독일의 위상이 커지면서 미국의 對EU 파트너는 독일로 변모

□ **(EU 정책방향) EU의 신집행위원회는 6개 정책의제*를 선정**하고, 향후 5년 동안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

* ❶그린 딜, ❷사람을 위한 경제, ❸디지털 세대의 유럽, ❹삶의 질 개선, ❺글로벌 리더십 발휘, ❻유럽 민주주의 제고임

○ (경제) **❶그린 딜** 및 **❷디지털 세대의 유럽**과 연관된 산업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경 및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지원 집중 전망

○ (통상) **❺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기치** 아래 FTA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통상감찰관직의 신설, WTO 개혁 등을 추진

□ **(EU 예산규모) 브렉시트로 인해 EU 총 예산은 12~13% 감소 전망**

○ **영국은 EU 총 예산수입 중 12~13%를 분담**하여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에 이어 **4위 기여국**

-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의 미래관계 형태에 따라 현 분담금의 최대 83%까지 부담 가능 (EU 단일시장 지위 혜택 여부)

□ **(EU 예산계획)** '21~27년 예산 제안 중 **그린딜 및 新산업 정책** 관련 **환경, 디지털 분야** 예산은 **확대, 공동농업정책과 결속기금** 예산은 **축소**

○ **'단일시장, 혁신, 디지털' 항목은 증가로** 5G, 클라우드 컴퓨팅 등 **첨단 디지털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** 등에 집중 투입 전망

○ **'공동농업정책'과 '결속기금' 예산 감소**로 **동구권 유럽 SOC 건설,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**은 축소 불가피

□ **(대응방안)** 브렉시트 및 **EU 新집행부의 정책 및 예산변화에 따른 기회요인**을 적극적으로 활용

○ 그린 딜, 디지털 경제 확대를 위한 **에너지 절감 및 순환경제, IT** 등 **혁신기술 개발 관련 협력수요 증가** 예상

- (그린딜) 신재생 에너지 개발,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산업 폐기물, 오염물질 개선 조치 강화 관련 프로젝트 및 관련 산업 집중 육성
- (디지털 경제) AI 육성 및 데이터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, 민간부문과 협력, 인프라 구축 등을 활발하게 추진 예정

○ EU 결속기금으로 추진되던 **중동구 프로젝트 시장은** 위축 가능성이 높아 향후 **이들 국가의 산업고도화에 동행**하는 방식으로 협력 전환 필요

- 서구 글로벌기업들과 연계된 역내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**GVC 협력, 공동 R&D 추진 등 협력 고도화** 필요
- 코로나19 사태 이후, 보건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**EU 차원의 지원도 급증**할 것이므로, **K-방역 등 적극적 진출** 필요

Ⅰ 브렉시트 주요 경과 및 주요 의제

1. 브렉시트 주요 경과 및 전망

□ EU 탈퇴법안에 의해 영국은 '20.1.31일자로 EU를 탈퇴하였고, 전환기간('20.12.31일까지) 동안 EU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완료 예정

○ 조기 총선을 통해 과반의석을 획득한 보수당의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법안을 통과시켜 '20.1.31일부로 EU를 탈퇴

- 탈퇴 직후 전환기간(~'20.12.31일)이 시작되어 영국은 '20년 말까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

* 단, 양측이 전환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, '20.7.1일 이전 공동합의에 따라 한 차례, 최대 2년 연장 가능함(합의안 132조).

【브렉시트 주요 일지】

○ '16.6월	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
○ '17.3월	영국, EU에 탈퇴의향서 제출
○ '18.11월	영-EU 간 탈퇴협정 합의
○ '19.1월～'20.1월	영국 및 EU 의회의 합의안 비준 ('19.10월 새 합의안 타결) (영 의회의 4차례 합의안 비준 거부 및 영국 조기총선 실시)
○ '20.1.31일	영국의 EU 탈퇴 (브렉시트)
○ '20.12.31일까지	전환기간

□ 한편 현재까지도 EU-영국 간 미래 관계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존재

○ 양 측 입장 차 및 코로나19 등으로 협상 난항

- 총 4차례의 미래관계 협상('20.6월 기준)이 있었으나, 별 진전 없는 상태

○ 협상 진행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전환기간 내 협상 완료 가능성 희박

- 또한 현재 조건 하에서는 전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'20.6.30일까지 양 측의 합의가 필요하나 영국은 연장 불가, EU는 연장 불가피 입장으로 대립

* 영국의 EU 탈퇴법에는 전환기간의 연장불가가 명시되어 있으나, 법안 수정 및 EU와의 합의에 따라 추후 에도 전환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2. 미래관계 협상 주요 의제

□ 영국의 의무규정 없는 EU 회원국 수준의 단일시장 참여 요구와 EU의 환경·노동규정 준수 조건 전제 시장 접근 허용 입장이 대립 중

○ (영국) 최대한의 시장접근성을 유지하고 자율적 정책·규제주권 확보 희망

- EU 탈퇴로 영국은 자유로운 정책과 자율적인 규제체제를 채택할 수 있는 반면, EU와의 규제차이로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

○ (EU) 일관된 규정 적용 등 EU 운영체제의 단일성을 유지하는데 초점

- 이는 추가적인 회원국 탈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 가능

□ 경제·통상 분야 미래 EU-영국 관계에 있어서도 EU는 시장 접근이 용이한 '노르웨이 모델'과 자율적 규제체제가 가능한 '캐나다 모델'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'맞춤형 협정' 체결을 희망

* 미래의 EU-영국 관계는 시장 접근성이 높은 순서로 ① 노르웨이 모델(EEA 모델), ② 스위스 모델, ③ 캐나다 모델(FTA 모델), ④ 터키 모델(관세동맹), ⑤ WTO 모델(노딜 브렉시트, MFN 관세 적용) 등으로 구분 가능

○ 영국 정부는 노르웨이, 캐나다, 스위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영국의 입장에 맞춰 선별적으로 혼합한 형태를 지향

【영-EU 간 미래관계 가능 유형별 주요내용】

	영-EU 관계	장 점	단 점
1	노르웨이 모델 (유럽경제지대, EEA)	-EU 단일시장 지위 -독자적 통상정책 가능	-EU 규제 및 분담금 의무 -역내 노동이동 제한 못함
2	스위스 모델	-EU 단일시장 지위 -독자적 통상정책 가능 -역내 노동이동 제한 가능	-EU 규제 및 분담금 의무 -EU측이 원하지 않는 모델
3	캐나다 모델 (FTA)	-일정수준 시장접근성 확보 -독자적 통상, 노동유입제한 -EU 분담금 의무 없음	-노르웨이 모델보다 시장접근성 낮음 -일부 EU규제 수용 의무
4	터키 모델 (관세동맹)	-EU의 기체결 FTA 승계	-독자적 통상정책 제약
5	WTO 모델 (MFN관세)	-통상정책 주권 최대화	-시장접근성 제한

Ⅱ 브렉시트 이후 EU의 정치·경제적 변화

1.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 위상 변화

□ (EU)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위상은 약화될 것으로 보이나 외교, 안보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

○ 영국을 제외할 경우 EU의 세계 GDP(PPP) 비중은 2위(15.79%)에서 3위(13.62%)로 하락

- 영국 포함 시 EU는 세계 GDP(PPP)에서 15.79%를 차지하여 미국(14.90%)에 앞서나 영국 제외시 그 비중이 13.62%로 감소하여, 중국(19.71%), 미국에 이어 3위 차지 ('19년도 기준)

* 세계 GDP(PPP) 비중(%, '19년, IMF) : 중국(19.71), EU(15.79), 미국(14.90), 인도(8.27), 일본(3.94)

○ 브렉시트에도 유럽통합이나 대서양 관계(미국-유럽)는 큰 영향 없을 전망

- 유럽은 브렉시트가 초래한 유럽회의주의(Europessimism)를 극복하고자 유럽통합과 자유무역 조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실천 중

-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제 관계에 있어 '유럽'은 여전히 EU라는 거대 경제·정치 블록을 활용 가능

- 또한, 냉전 이전에는 영국이 유럽 내 대서양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으나, 현재는 미국의 對EU 파트너는 영국에서 독일로 변모하였으므로 미국과 EU와의 관계 또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

○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근거한 EU의 기본 통상정책 기조 유지 예상

-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의 무역의존도가 89%인 것을 비롯해('18년 기준), 많은 회원국들도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자유무역체제 유지는 EU에게 매우 중요

-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미국과 통상분쟁을 겪으면서 EU는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대외적 정체성을 한층 강화해옴

  * 최근 많아지는 EU의 보호무역 조치는 브렉시트 영향 보다는 미국과의 통상마찰, EU 내부결속을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함

□ (영국)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타격은 물론 국가브랜드가 하락하고 대서양 관계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

○ '17년과 '18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EU보다 각각 0.8%p, '19년은 0.2%p 뒤쳐지면서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

  *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의 국내정치적 혼란 때문에 영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증가율이 주춤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

○ 영국의 2019년 국가브랜드는 5위를 차지하며 전년도 4위에서 한단계 하락 (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업체 안홀트 입소스)

  * EU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보다 낮은 순위

- 영국의 글로벌 매체들 또한 극단적인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주의, 유연성 있는 나라라는 영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브렉시트 혼란 때문에 크게 훼손되었다고 자평 (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)

○ 또한,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미국 또는 중국과 새로운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도 제기

- 영국은 EU를 탈퇴 후 '글로벌 영국'을 대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으나,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대립되어 영국이 미국과의 FTA 신속 타결 및 '특별한 관계'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미국과의 FTA가 타결된다 해도 영국은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에 합류하던지, 미국을 설득해 자유무역에 복귀시키던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으로 예측 (Harvard Kennedy School)

2. EU 新집행위 구성 및 정책 방향

□ 2019년 EU의 신집행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, 새로운 집행위원장으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(Ursual von der Lyen)이 임명

* 폰 데어 라이엔은 유럽통합론자로서 EU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

【EU 新집행위원회 개요】

○ '19.12.1일 출범 ('24년까지 5년 간)

○ 집행위원장 :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(獨 국방장관 출신, 최초 여성 집행위원장)
- 영국 제외 EU-27명의 집행위원단으로 구성

○ EU의 새로운 예산년도('21~27년)와 新집행부 출범이 우연히 맞물리면서 관심 집중

< 新EU집행위원회 구성 >

자료: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

□ EU의 신집행위원회는 6개 정책의제*를 선정하고, 향후 5년 동안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 계획

* ❶그린 딜, ❷사람을 위한 경제, ❸디지털 세대의 유럽, ❹삶의 질 개선, ❺글로벌 리더십 발휘, ❻유럽 민주주의 제고임

○ (경제) ❶그린 딜 및 ❸디지털 세대의 유럽과 연관된 산업정책 패키지를 통해 환경 및 디지털화에 대한 정책지원이 집중될 전망

○ (통상) ❺글로벌 리더십 발휘의 기치 아래 FTA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고 통상감찰관직의 신설, WTO 개혁 등을 추진

<EU의 그린딜 및 디지털화 관련 정책 추진 계획>

그린 딜 (Green Deal)	- **2050년까지 EU 내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('유럽기후법' 제안)** - 역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* 도입 고려 *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 부과 - 신재생에너지 개발,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 중점 추진 - 순환경제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산업전략 추진 - 친환경 수송수단 위한 온/오프라인 인프라 확충 - 유럽 그린딜 추진 위한 1천억 유로 규모 금융 지원 - 친환경 농식품 산업 지원 - 삼림을 파괴하지 않는 밸류체인 지원 - 산업폐기물 및 오염물질 개선조치 강화
新산업정책 패키지	- **친환경, 디지털화, 중소기업, 글로벌 경쟁력**이 키워드 - **(산업전략)**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목표 - **(중소기업 전략)** 경쟁력 제고, 디지털 기술인력 육성, 친기업 환경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- **(단일시장 이행계획)** 회원국간 상이한 규제수준, EU 규정의 반영 차이 해소
AI 및 데이터 전략	- 미국(기술력)과 중국(데이터 활용)로 양분된 **세계 AI 및 데이터 시장에서의 EU 경쟁력 제고 목표** - 기술혁신, 민간부문과 협력, 인프라 구축 등 산업발전 지원 - 데이터 거버넌스, 데이터 접근 및 활용에 필요한 **올바른 규제체제 조성으로 역내 단일 데이터 시장 구축**
순환경제 행동계획	- 폐가전 및 휴대폰 수거 및 재판매, 배터리 재활용, 포장재 낭비 개선,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

3. EU의 주요 경제 · 산업 정책

가. 유럽 그린딜 (European Green Deal)

□ ’19년 EU 집행위는 ’50년까지 EU 내에서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(일명 ‘탄소중립’)를 설정하고,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유럽그린딜을 발표

○ EU 집행위는 기후법(Climate Law) 제정, 탄소국경세 도입 등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계획

- (기후법 제정) ’20년 3월까지 기후법을 제정하여 ’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,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

- (탄소국경세 도입)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인 ‘탄소국경세’ 도입 고려 중

□ 온실가스 감축 4대 중점 분야(청정에너지, 지속가능한 산업 및 순환경제, 건축, 수송)와 더불어 ‘친환경 농식품’ 및 ‘생물다양성 보존’을 주요 정책분야로 제시

○ (청정에너지)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75%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

-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·저장·활용과 같은 혁신기술과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제안

○ (지속가능한 산업 및 순환 경제) ’20년 3월 EU 산업정책과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저탄소경제를 지원하는 산업전략을 추진 계획

-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, 저탄소 기술 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초점

○ (건축) ’20년 중 건물의 에너지 성능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에너지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철폐 노력

○ (수송) ’20년 중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’50년까지 90%까지 감축

- 자율 차량, 커넥티드 차량 등 다양한 수송수단의 개발 및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개발 지원

○ (친환경 농식품)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제안

- 화학 살충제·비료·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고 순환경제로의 전환 장려

○ (생물 다양성) ’21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하고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

나. EU 新산업 패키지

□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과 디지털화 등을 중심으로 EU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 패키지를 발표 (’20.3.10일)

○ EU의 산업경쟁력이 경쟁국 대비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탄소중립의 목표와 함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전략 필요성 제기

□ EU 신산업 패키지는 산업전략, 중소기업전략, 단일시장정책으로 구분되며 이중 산업전략은 ‘유럽 그린딜’의 핵심축을 이룸

○ (산업전략) EU는 산업전략을 통해 ’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해 7대 중점과제, 산업 자율성 강화, 거버넌스 파트너쉽 등을 포함한 이행방안을 제안

- (7대 중점과제)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화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7개 과제를 선정

< EU 신산업 패키지 산업전략 7대 중점과제 >

분야	실행계획
디지털 단일시장 심화	△단일시장이행계획 및 TF 수립 △지속가능한 디지털 유럽을 위한 중소기업 전략 채택 △2021년까지 EU 경쟁법 검토 및 필요 시 개정 △지재권 보호 강화 △유럽 데이터경제 개발을 위한 전략이행 가속화 △디지털서비스법안 개선 △플랫폼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
글로벌 공정경쟁	△2020년 중 제3국 정부보조금에 대한 백서 발간 △WTO 산업보조금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△국제공공조달규정 신속한 채택 △2020년 중 통관 절차 강화를 포함한 EU 관세연합 이행계획 마련
기후중립 지원	△에너지 분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유럽에너지데이터 플랫폼 활용 △청정 철강 및 화학분야 EU전략 수립 △범유럽에너지망규정(TEN-E) 검토 △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전략 △건물의 에너지효율 전략
적극적 순환경제	△순환경제실행계획 채택 △지속가능한 배터리 관련 규정 마련 △EU섬유 전략 △순환경제에서 소비자의 역할 강화
산업혁신 내재화	△연구혁신의 미래에 관한 정책 마련 △Horizon Europe 분야 PPP 추진
기술 및 재교육	△2030년까지 직업훈련 아젠다 개정 △ 기술인력유럽협약(European Pact for Skills) 추진 △디지털교육시행계획
투자 및 금융	△EU 보조금 규정 검토 △지속가능한금융전략 개정 △2020년 중 자본시장 통합을 포함한 자본시장연합(Capital Markets Union) 실행계획 수립

- (산업 자율성 강화)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축인 인프라 구축 관련하여 5G 및 사이버보안을 위한 활성화 계획 마련

- (거버넌스 파트너십) 새로운 플랫폼인 유럽청정수소연합, 저탄소 산업 연합, 산업클라우드 및 플랫폼 분야의 연합 신설 추진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

○ (중소기업전략) EU경제와 고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친기업적 환경 조성 및 성장 도모

○ (단일시장이행계획) 회원국 간 상이한 규제수준, EU 규정의 반영 차이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

다. AI 및 데이터 전략

□ EU 집행위원회는 AI 백서와 유럽 데이터 전략 등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되어 있는 전 세계 AI와 데이터 시장에서의 EU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을 제시 ('20.2.19일)

○ (AI 백서) AI 개발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8개 분야 정책을 제안

< 우수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8대 분야 정책 >

분야	실행계획
회원국간 협력	- EU 집행위는 회원국에 2020년 말까지 기존에 발표했던 AI 협력의 개정안을 제시(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AI 투자 등)
연구혁신	- AI 기술 테스트를 위한 우수 센터 설립
기술	- 선도대학 및 고등교육기관과 함께 우수 교수 및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
중소기업	- 회원국당 최소 한 개의 AI관련 혁신 디지털허브 구축 - 유럽투자기금을 통해 2020년 1분기에 1억 유로 규모의 AI 시범프로젝트 추진
민간부문과 협력	- AI, 로보틱스, 데이터 분야 새로운 민관협력프로그램(PPP) 개발
공공부문 AI수용	- 보건, 지방행정,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AI 개발, 시험 및 수용 장려
인프라	- 퀀텀 컴퓨팅, 클라우드 인프라 등에 40억 유로 이상 투자
국제협력	- AI 개발에서 EU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

○ (AI, 사물인터넷 및 로보틱스의 안전과 책임) AI 및 디지털 경제와 관련하여 EU의 정책과 규제내용 제시

- 디지털 관련 안전은 제품에서 기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의 분실에 따른 수반되는 위험까지 포괄해야 하며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

○ (유럽 데이터 전략) 글로벌 리더로서 EU를 위해 역내 단일데이터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제시

- 데이터 거버넌스, 데이터 접근 및 활용에 있어 올바른 규제체제를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의 기회를 EU 역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개선

라. 새로운 순환경제행동계획

□ EU 집행위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새로운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발표 ('20.3.11일)

○ EU 집행위는 유럽그린딜에서 추구하는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자원의 재활용을 포함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

-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EU는 '30년까지 GDP 0.5% 포인트 추가 성장과 7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EU 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□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자제품 및 ICT, 배터리 등 주요 분야별 행동계획을 제시

○ (전자제품 및 ICT) 공동의 충전표준 도입, EU차원의 노후 핸드폰 및 전자제품 수거 및 재판매 체제 마련, 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물질의 폐기에 대한 EU 규제검토

○ (배터리) 모든 배터리의 수집 및 재활용률 제고, 비충전 배터리의 시장출시 차단

○ (포장) 불필요한 포장 및 낭비 개선, 포장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제고, 포장재의 친환경성 강화

○ (플라스틱)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제한,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라벨링 및 생분해성 플라스틱 물질 사용 장려,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새로운 지침 마련

○ (섬유) 에코디자인 개발, 섬유폐기물 수거 시스템 도입

4. EU의 주요 통상정책

가. FTA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및 통상감찰관직 신설

□ EU는 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

○ EU는 일본 등과 FTA를 체결하고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 개시

- EU와 일본 간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이 '19.2월에 발효되었고, 이에 앞서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교역협정(CETA)도 '17.9월 발효

○ EU의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정책 기조와는 대비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EU의 자유무역 기조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

□ EU 집행위원회는 통상감찰관직(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)을 통해 EU가 체결한 FTA의 환경, 무역, 노동 이슈의 효과적인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계획

○ 통상감찰관직은 '20.7월 중 임명 예정이며 일단 환경, 무역, 노동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나, 향후 EU산 제품에 대한 제3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(반덤핑 또는 보조금)을 감시하는 업무로 확대예상

나. WTO 개혁관련 EU 정책입장

□ (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금지보조금 확대)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통보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금지보조금을 확대할 것을 요구

○ EU는 보조금 통보를 지연 또는 누락한 국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, 비록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, 미국과 같이 WTO 내 회원국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

○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금지 보조금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

□ (분쟁해결 제도 개혁) EU는 WTO 분쟁해결 상소기구의 개혁을 위해 '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(DSU)'의 포괄적 개정을 제안

○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소기구의 90일 심리시한에 대해 당사국과 상소기구 간 협의를 통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놓되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

○ 상소기구 위원 정원을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기타 상소위원의 임기에 대해 6~8년의 단임제 제안(현재는 임기 4년 중임제)

□ (21세기 신무역규범 제정) EU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서비스 및 투자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범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

○ 디지털 무역 관련 부당한 장벽을 조속히 철폐하는 한편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자상거래 무역규범의 제정이 시급하며, 특히 강제적인 기술 이전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

○ 또한 투자에서 있어,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지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

□ (개발도상국 지위 제한) WTO의 현행 개도국에는 세계 최고의 무역대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국가들이 개도국의 특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도국 지위 졸업제도를 제안

○ 개도국들이 전체적으로 또는 협정별로 개도국을 졸업하든지 아니면 개도국 우대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기를 권고

○ 추가적인 개도국 우대 조치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, 그로 인해 다른 WTO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 그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

Ⅲ 브렉시트 이후 EU 예산 변화 및 영향

1. EU 예산 구조 및 회원국별 기여도

□ EU 예산을 위한 수입은 크게 전통적 자체재원과 회원국의 기여금으로 구성

○ 전통적 자체재원은 ① 관세수입(상품), ② 농산품에 대한 특별관세로 이루어지며, 2018년 기준 EU 전체 예산수입의 12.8%에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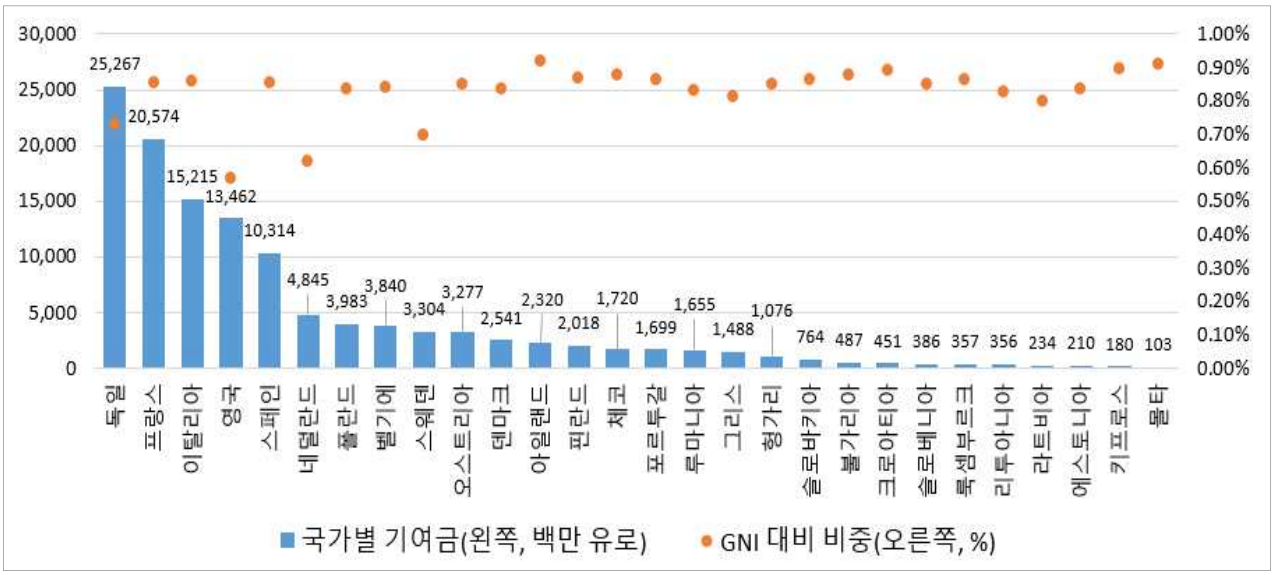
○ 회원국의 기여금은 ① 부가가치세(VAT) 기반 재원과 ② 국내총소득(GNI) 기반 재원으로 구성되며 2018년 기준 전체 EU 수입의 88.1%를 차지

□ 국가별 기여금 규모를 살펴보면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영국, 스페인 순서로 많아 대체로 경제규모에 따라 기여금이 결정 ('18년 기준)

○ 독일(252.7억 유로), 프랑스(205.7억 유로), 이탈리아(152.2억 유로), 영국(134.6억 유로), 스페인(103.1억 유로) 순

- 최대 기여국인 독일의 기여금이 하위 20개 회원국의 기여금 합(246.3억 유로)보다 많을 정도로 큰 회원국이 많은 재정부담을 갖는 구조

< EU 예산에 대한 국가별 기여금 ('18년 기준) >



자료: European Commission, https://ec.europa.eu/budget/graphs/revenue_expediture.html

□ EU의 지출 중 가장 큰 항목은 농업보조금 지출과 결속정책을 위한 낙후 지역 지원금으로 지역개발에 관한 예산과 농업보조금을 많이 수령하는 회원국이 EU 예산의 혜택을 많이 누리는 구조

○ 농업 관련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국가는 프랑스이며, 스페인, 독일, 이탈리아, 폴란드,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('18년 기준)

○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폴란드, 스페인, 독일, 이탈리아, 프랑스 등의 순서로 중동부유럽 국가일수록 전체 수혜 비중 중 지역개발 예산의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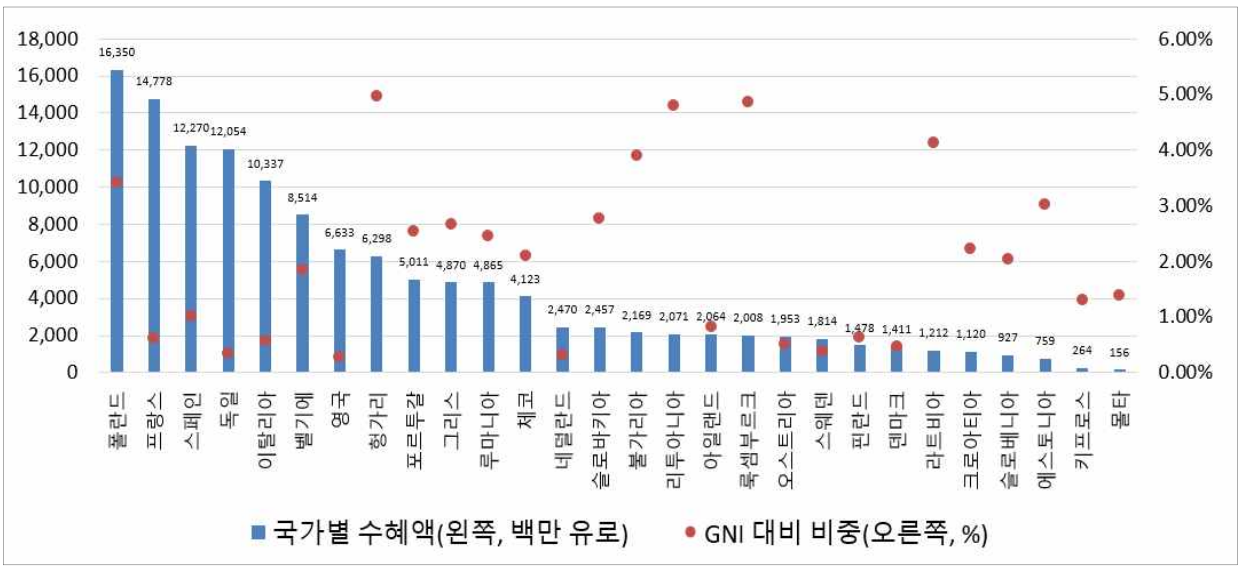
□ 2018년 기준 EU 예산의 최대 수혜국은 폴란드(163.5억 유로)이며, 이어 프랑스(147.8억 유로), 스페인(122.7억 유로), 독일(120.5억 유로), 이탈리아(103.4억 유로), 벨기에(85.1억 유로) 순

○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EU 예산의 수혜를 누리고 있으나, 기여도 대비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주요 수혜 대상인 것으로 확인 가능

-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수혜 정도가 자국 GNI의 2% 미만인 반면,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2%를 크게 상회

-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EU 기관이 위치해 있어 공공행정 예산이 해당 국가들에 대한 지출로 기록되어 수치상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표시

< EU 예산지출의 수혜현황 ('18년 기준) >



자료: European Commission, https://ec.europa.eu/budget/graphs/revenue_expediture.html

2. 영국 기여도 및 브렉시트 이후 예산 분담

□ 영국은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에 이어 EU 총 예산 수입 4위 기여국

○ 영국은 EU 총예산(1,423.6억 유로)의 11.5%(164억 유로)를 납부 ('18년 기준)

* 독일(20.6%), 프랑스(15.6%), 이탈리아(12.0%)

○ 한편, '00~'18년의 기간 중 EU 총예산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2.3%로 영국의 EU 탈퇴는 EU 총예산이 과거에 비해 12~13% 수준 감소하는 것을 의미

□ 반면, 예산 수혜를 반영할 경우 영국은 독일에 이어 2위의 순기여국('18년 기준)

○ 164억 유로 기여, 66.3억 유로 수혜로 순기여액은 97.9억 유로에 달함

- 영국의 순기여액은 비슷한 경제규모인 프랑스의 순기여액인 74.4억 유로에 비해 큰 액수이며, 이탈리아의 순기여액(67.0억 유로)보다도 훨씬 큼

- 영국의 EU 탈퇴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순기여국의 이탈을 의미

□ 영국은 전환기간 동안에는 EU 회원국에 준하는 예산 의무를 이행

○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은 ① '19~20년 EU 예산상의 의무를 이행하고, ② '20년 말 기준 EU 예산상의 잔여 의무를 부담하며 ③ 탈퇴일 기준 영국의 EIB(유럽투자은행) 최고 자본금만큼의 보증 제공 및 납입자본금 회수에 합의

□ 다만 향후 영국이 EU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따라 EU에 대한 추가 예산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영국 정부는 향후 EU-영국 관계에 상관없이 EU의 연구개발, IT 등의 프로그램에 기여-수혜 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

- 만약 영국이 노르웨이 모델을 따를 경우, 현행 EU 예산 분담금의 최대 83%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

* 비EU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EU 단일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연평균 4.47억 유로를 EU 예산에 기여하고 있음

3. EU 예산 계획에 따른 영향 및 기회

가. EU 예산 계획 (2021~2027)

□ EU 예산은 다년도재정계획(MFF: Multi-annual Financial Framework)에 의거, 7년 단위로 편성되며, 현재 '21~'27년 예산 제안에 대한 협상 진행 중

○ '21-'27년 EU의 예산은 우선순위의 조정, GNI의 증가, 브렉시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분야별 증감여부가 다르게 나타남

□ 이번 예산 제안의 특징은 단일시장 및 혁신, 디지털 등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공동농업정책과 결속기금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

*** 동등 비교를 위해 전 회계연도('14~'20년) 예산 배정액에서 영국 기여분 제외**

○ 이는 브렉시트의 영향보다는 EU 예산 지출의 장기적 변화를 반영

- 전체 경제 중 농업 비중이 감소하고 연구개발, 혁신, 환경 등 새로운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 분야에 대한 예산 배정이 급속도로 증가
- '10년대 이후 EU 신규 회원국 가입이 감소하면서 결속기금 수요도 감소

□ (증가) 혁신 경제,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'단일시장 및 혁신, 디지털'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고, '안보와 국경관리' 등 예산도 크게 증액

○ (대분류) '1.단일시장, 혁신, 디지털' 항목이 전 회계연도('14~'20년) 대비 728.3억 유로가 증가(64%), '2.결속과 가치' 항목도 616.7억 유로 증가(16%), '4.이민과 국경관리' 항목도 249.7억 유로 증가(252%)

○ (중분류) '1-(1)연구 및 혁신', '1-(2)유럽전략투자', '1-(4)우주', '2-(7)사회결속 및 가치' 등이 크게 증가하였고, 유로존의 안정화를 위한 '2-(6)경제통화동맹' 항목이 신설

□ (감소) '3-(8)공동농업정책' 관련 예산과 '2-(5)內 결속기금'은 감소

○ '3-(8)內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'은 162.7억 유로 감소(△17%)하였으며 '2-(5)內 결속기금'은 279.0억 유로 감소(△37%)

< '21~'27년 EU 다년도재정계획 제안 (약정액, 백만 유로) >

분류	①	②	③	
	2014-20년 예산(EU-28)	2014-20년 예산 (EU-27)	2021-27년 예산	② 대비 변화율(%)
1. 단일시장, 혁신, 디지털	**125,704**	**114,538**	**187,370**	**64%**
(1) 연구 및 혁신	77,694	68,675	102,573	49%
(2) 유럽전략투자	33,120	31,439	49,973	59%
(3) 단일시장	5,472	5,017	6,391	27%
(4) 우주	11,284	11,274	16,235	44%
2. 결속과 가치	**393,616**	**380,738**	**442,412**	**16%**
(5) 지역개발 및 결속	275,960	268,218	273,240	2%
- 유럽지역개발기금(ERDF)	201,140	193,398	226,308	17%
- 결속기금(Cohesion Fund)	74,589	74,589	46,692	-37%
(6) 경제통화동맹	280	275	25,113	신설
(7) 사회결속 및 가치	118,767	113,636	139,530	23%
3. 자연자원과 환경	**420,015**	**391,849**	**378,920**	**-3%**
(8) 농업과 해양정책	410,493	382,608	372,264	-3%
- 유럽농업보증기금(EAGF)	302,797	280,351	286,195	2%
-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(EAFRD)	100,273	95,078	78,811	-17%
(9) 환경과 기후행동	3,718	3,437	5,739	67%
4. 이민과 국경관리	**10,465**	**9,929**	**34,902**	**252%**
(10) 이민	7,516	7,085	11,280	59%
(11) 국경관리	5,543	5,439	21,331	292%
5. 안보와 방위	**2,014**	**1,941**	**27,515**	
(12) 안보	3,452	3,394	4,806	42%
(13) 방위	590	590	19,500	
(14) 위기 대응	1,225	1,209	1,400	16%
6. 근린정책과 세계	**94,521**	**94,521**	**123,002**	**30%**
(15) 대외행동	83,709	83,709	105,219	26%
(16) 가입후보국 지원	12,799	12,799	14,500	13%
7. 유럽공공행정	**69,584**	**69,584**	**85,287**	**23%**
합계	**1,115,919**	**1,063,100**	**1,279,408**	**20%**

자료: European Commission, https://ec.europa.eu/budget/graphs/revenue_expediture.html

나. 영향 및 기회

□ (영향) EU 결속기금 지원의 축소로 중동부 유럽과 및 남유럽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EU 결속그룹*(Friends of Cohesion Group)의 수혜 축소 예상

* (동구권 13개국) 헝가리, 폴란드, 체코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사이프러스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타, 슬로바키아, 루마니아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

* (남부유럽 4개국)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그리스

○ 지역개발 및 결속정책 관련 예산지원의 축소는 그동안 중동부 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누려온 추가 자본유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

- 분담금 감소 및 EU 정책변화와 함께 수혜국인 중동구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자격 상실이 원인

○ 특히, 폴란드, 헝가리 등 중동구 국가에서 EU 결속기금 프로젝트로 추진되던 SOC 건설,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 축소 불가피

* 폴란드는 EU 예산 지원의 가장 큰 수혜자로써 EU의 지원금은 폴란드 GDP의 약 2.4%

□ (기회) 연구개발, 디지털 등 혁신분야에서의 예산 확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 가능하며 코로나19 공동예산 편성 또한 단기 경기부양 효과 기대

○ EU의 예산 중 연구개발, 디지털, 단일시장,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요인 창출 가능

- 이 분야의 지원이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프로젝트와 결부될 경우, 새로운 사업기회가 발생할 가능성

○ 한편, EU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추가 편성 예정인 7,500억 유로 규모의 공동예산으로 EU 경기부양 및 사업 확장 가능성

- 특히 경기침체의 폭이 큰 국가와 낙후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의 결속기금과 유사한 효과 기대

* 이탈리아 1,730억 유로, 스페인이 1,400억 유로, 프랑스와 폴란드는 각 380억 유로, 의 독일도 280억 유로 수령 예상

Ⅳ 시사점 및 대응방향

□ 영국은 EU 내 2~3위의 인구 및 경제규모를 가진 주요 회원국으로 EU의 정치·경제적 위상 제고에 큰 공헌을 한바, **브렉시트는 다양한 영역에서 EU에 변화**를 가져올 것

○ 영국은 EU GDP와 인구에 있어 각각 16%, 13%를 차지하며, EU 예산에도 11.9% 기여하면서 독일(20.8%), 프랑스(15.6%)에 이은 3위를 차지하는바,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경제적 위상과 단일시장의 운영에 큰 영향

- 영국이 탈퇴한 이후 EU가 직면할 정치·경제·사회적 변화를 예상하고, 향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설정할 필요

□ 영-EU 간 입장 차 및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영-EU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이므로 **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필요**

○ 브렉시트('20.1.31일) 이후 총 4차례의 미래관계 협상('20.6월 기준)이 있었으나, 별 진전 없는 상태로 전환기간('20.12월말) 내 협상 완료 가능성 희박

○ 노딜 브렉시트 시에도 **한-영 간 교역**은 한-영 FTA 발효로 **큰 변동 없을 전망**이나,

- 현지진출 기업들의 **중동구 제조업기지産 완제품을 영국으로 수출 시** 관세·통관·인증 등에서 **무역장벽 발생**

□ 브렉시트 및 EU 新집행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**기회요인 포착**

○ 그린 딜, 디지털 경제 등 EU 新집행부의 중점 추진정책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순환경제, IT 등 **혁신기술 개발 관련 협력수요 증가** 예상

- (그린딜) 신재생 에너지 개발,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산업 폐기물, 오염물질 개선 조치 강화 관련 프로젝트에 정부 지원 집중

- (디지털 경제) AI 육성 및 데이터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혁신, 민간부문과 협력, 인프라 구축 등도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

□ 기존 EU 예산의 주요 수혜국이었던 **중동구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는 전환이 필요**

○ EU 결속기금으로 추진되던 프로젝트 시장은 위축 가능성이 높아 향후 **이들 국가의 산업고도화에 동행**하는 범위로 사업 확대 필요

- 서구 글로벌기업들과 연계된 역내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**GVC 협력, 공동 R&D 추진 등 협력 고도화** 필요

- 아울러 **소득증가에 따라 확대되는 소비시장 적극 공략** 필요

○ 한편, 코로나19 이후, 보건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EU 차원의 지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**K-방역 등의 입지를 활용, 적극적 진출을 도모**할 필요

- 의료장비 교체, 병원건설 등 전통적인 보건 수요 외에 **포스트 코로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**하고, 이 분야에서 중동부 유럽 진출 가능 여부를 타진할 필요 /끝/

작 성 자

▪ 통상지원팀 박영훈

Global Market Report 20-014

브렉시트 이후 EU 변화 및 대응 방향

발 행 인 ▌권평오
발 행 처 ▌KOTRA
발 행 일 ▌2020년 6월
주 소 ▌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
전 화 ▌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▌www.kotra.or.kr
문 의 처 ▌통상지원팀 (02-3460-7508)
ISBN ▌979-11-6490-434-1 (95320)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